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군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1.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3. 6.19. ~ 6.27.(9일간)
- 감사장소 : 제2회의실
- 감사범위 : 2022. 1. 1. ~ 2022.12.31.
- 감사대상 : 경제산업국·안전환경국·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 자료요구 : 433건 ※별도자료 6건

3. 감사반 편성현황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 원 장	감사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4명	정우식	이 상 결 이 상 우	김 미 옥	허 윤 희
		김시욱			

4. 감사일정

구 분 일 시		감사대상 부서	감사장소	비고
2023. 6.19(월)	운영위 산회 후 ※ 운영위: 10:00	○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경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2회의실)	
2023. 6.20(화)	10:00 ~	○ 경제산업국 ▪ 에너지정책과 ▪ 농업정책과 ▪ 축수산과	경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2회의실)	
2023. 6.21(수)	10:00 ~	○ 안전환경국 ▪ 안전총괄과 ▪ 교통정책과 ▪ 환경자원과	경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2회의실)	
2023. 6.22(목)	10:00 ~	○ 안전환경국 ▪ 산림공원과 ▪ 토지정보과 ▪ 위 생 과	경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2회의실)	
2023. 6.23(금)	10:00 ~	○ 도시건설국 ▪ 도 시 과 ▪ 건 설 과 ▪ 도 로 과	경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2회의실)	
2023. 6.24(토)	(자료수집 및 검토)			
2023. 6.25(일)				
2023. 6.26(월)	10:00 ~	○ 도시건설국 ▪ 건축허가과 ▪ 주 택 과 ▪ 시설지원과 ▪ 신성장개발과	경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2회의실)	
2023. 6.27.(화)	운영위 산회 후 ※ 운영위: 10:00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경제건설위원회 회 의 실 (제2회의실)	

5. 주요 감사사항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 2022년 예산집행사항
-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진정, 민원사무의 조치사항
- 기타 자료요구사항 등

6. 감사방법

- 각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문서 확인, 필요 시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감사

7.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97	31	66
경 제 산업국	소 계	34	10	24
	지역경제과	10	6	4
	일자리정책과	4	0	4
	에너지정책과	7	1	6
	농업정책과	6	0	6
	축 수 산 과	7	3	4
안 전 환경국	소 계	33	10	23
	안전총괄과	5	4	1
	교통정책과	9	4	5
	환경자원과	5	2	3
	산림공원과	8	0	8
	토지정보과	3	0	3
	위 생 과	3	0	3
도 시 건설국	소 계	30	11	19
	도 시 과	5	2	3
	건 설 과	7	2	5
	도 로 과	5	3	2
	건축허가과	4	1	3
	주 택 과	3	2	1
	시설지원과	3	1	2
	신성장개발과	3	0	3

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따로 붙임”

○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지 역 경 제 과	1	노사공감센터 운영 방안 개선 및 위탁사무 관 리 감 독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공감센터(이하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 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매년 소요되는 센터 운영비가 과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었음. ◦센터는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노사관계 실태조사 및 연구, 근로자를 위한 취업 교육 실적이 전무하며,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사 간 협력·상생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공감센터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2022년 예산 121,800천원은 인건비의 비중이 과다하고 그 집행률이 69.4%에 그치는데,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바람 	
	2	부서 민원 친절도 개선 당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주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친절도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역경제과의 민원친절도는 43개 부서 중 43위에 해당함. ◦민원친절도 순위만으로 부서의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지 역 경 제 과	3	기 업 투 자 유치 보조금 지원 사후 관리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은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임. ◦기업유치투자보조금 지원조건의 고용인원 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사업이 원 취지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4	공 장 등 록 화상 상담 서비스 이 용률 향상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신규 공장등록 61건에 비하여 공장설립 화상 상담 서비스 이용 실적이 17건에 불과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1,000천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화상상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5	공장등록 업무 추진 철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 공장등록 취소 24건 중 (12건, 50%)이 웅촌면에서 발생되었으며, 2022. 4. 12. “웅촌면 공장 설립 ‘또개기’ 편법 의혹” 으로 언론에 보도 되기도 하였음. ◦웅촌면의 공장등록 취소 비중이 높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착한 가격업소 가격 정보 전면 재조사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12. 기준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중 14개소는 2011년에 지정된 이후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가격 정보는 현재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 ◦지정된 업소의 가격 정보가 현재까지 유지되는지 전면 재조사하여 현행화하고, 신규업소 발굴에도 노력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7	봉계시장의 전통시장 지정 해제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계시장은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음에도 부서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지 역 경 제 과	8	중소기업 워크숍 관내 추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워크숍 예산은 참여자 자부담 외 군비도 투입되는 만큼 군민의 세금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탐방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9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 심사 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열린 자세 수용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고, 조례안 심사 시 상임위에서 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음. 이에 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재검토 결과 선거법 저촉이 우려되어 조례개정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조례안, 예산안 등 의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여 수용하기 바람. 	
	10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 지 분양률 제고 대책 강구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원 감사에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초기에 실시된 수요조사의 타당성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 분양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낭비되는 기회비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일 자 리 정 책 과	1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노력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선8기 4년간 일자리 2만5천개 창출을 목표로 하였음. ◦예산 지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추진 실적에 있어 구인상담은 증가한데 비해 구직상담과 취업률은 감소하였음. ◦다양한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취업률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추진중인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령별, 성별, 미취업현황관리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생성하여 일자리안내 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과 구직이 서로 원하는 조건에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3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 우선 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라도 수의계약은 최대한 울주군 관내 업체와 울주군민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4	무료직업소 활성화 방안 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소개소 현황이 37개소인데 시니어클럽, 울주 지역자활센터 등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료 직업소개소에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에너지정책과	1	원자력 안전사고 대민정보 전달 시스템 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재난문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신속하게 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한 바 있음. ◦현재 원전사고 발생 시 2가지 시스템(ACS, SMS)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ACS 발송 대상자는 2021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지 않았으며 SMS 알림 서비스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함. ◦ACS 발송 대상자를 이장 외 반장 및 사회단체장으로 확대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고 SMS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 원자력 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2	방사능 방재 훈련 미흡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에 실시한 방사능 방재 훈련은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훈련이 필요한 인원에 비하여 참여 인원이 매우 적음. ◦안전사고 정보 전달체계 개선과 더불어 방사선 비상 시 실질적인 상황 대응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형식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임.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노력 당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군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속히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협의 노력을 당부하였음. ◦도시가스 공급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경동도시가스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울주군은 울산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비율이 높으므로, 울주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 가스요금을 보조하거나 시비를 확보하여 배관망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에너지정책과	4	해양 내 방사선 오염도 측정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 공기시료 채집기, 빗물채집기를 구비하여 분석중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해양 방사선 오염도 측정의 검사폭과 검사구역을 확대하는 등 적합한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 측정 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5	주민-한수원 지역상생 협력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방안 강구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협력기금은 원전인접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협력 자금으로, ◦해당 기금이 울주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므로 부서에서 집행 실태를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으나 주민 협의체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이므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6	대학생 장학사업 지급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군민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울주군 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학업’ 우수가 ‘성적’ 우수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성적순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하지 말고 울주군의 대학생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7	두서 서하마을 내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서 서하마을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2022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연기되었음. ◦해당 지역은 공공택지개발(공공타운하우스)로 조만간 도시가스가 보급될 예정이므로 배관공사 중 복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하여 LPG와 도시가스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을 설치할 것.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농업정책과	1	울주배 단일 브랜드 구축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배’는 울주군의 대표 농특산물 중의 하나임. ◦군에서 생산되는 배 브랜드의 명칭이 지역 및 생산 주체별로 모두 달라서 통일화 작업이 필요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배 단일 브랜드 구축을 건의한 바 있었음. ◦울주군 배 과수 농가에서도 브랜드 단일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지역 농협 및 원예농협과 등과 적극 협의·노력하여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울주배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기 바람. 	
	2	설계 변경 최소화 방안 강구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시점부터 현장여건이나 주변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편성되어야 함. ◦2022년도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은 55건에 달하며, 설계변경 주된 사유가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 반영으로 나타남.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는 있겠으나 설계변경은 공사비의 증감을 초래하고 준공시한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제 시공시에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3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조속 추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울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업양읍 구 수리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청량읍 울리에 이전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 변경을 계획하였음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2022년 하반기에 센터 건립 부지를 다시 언양읍으로 변경하였음. ◦부서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2024. 1. 60억원이 지원되는 국비공모사업에 신청 예정이라고 하나 6년이 지나도록 부지 변경 2차례 외 진척 사항이 없고 군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음. ◦농민들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염원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의 추진력을 집중·발휘해 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농 업 정 책 과	4	울주군 농민 농업 관련 영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울주군에서는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농민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작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음. ◦그러나 울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인근 지역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상토, 부직포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할 것임. ◦울주군에 농지를 소유한 울주군 외 거주민이 울주군에 정착하는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두어 울주군 농업행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기 바람. 	
	5	쌀 직불금 등 신청 안내 시 적극행정 실천 요청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직불금 등 여러 지원 사업 신청 시 이장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고령 농민은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만으로는 농민들에게 각종 사업 신청 안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좋은 지원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로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주기 바람. 	
	6	농업용 드론 적극 지원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인데,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면 인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수분 작업, 병충해 예방, 작황 개선에 월등한 효과가 있으므로 농촌 드론 교육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축 수 산 과	1	한우불고기 특구 홈페이지 개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포털사이트 접속 경로가 매우 불편하고, 불고기 축제와 관련된 일반적 내용이나 홍보에 관한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 운영·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함. ◦포털사이트 내 홈페이지 접속 경로를 즉각 개선하고 홈페이지 내용 구성 시 언양·봉계지역 한우 맛집은 물론 울주군의 다양한 관광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 ◦또한 봉계에서 개최될 2023년도 불고기축제 의 홍보 계획을 세울 때 홈페이지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울주군 한우 사육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2	불고기 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변경고시 및 특구 명성회복을 위하여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 용역”에 4천만원을 투입하고서도 2022년 불고기축제는 주최측의 의견 불일치로 개최되지 못하였음. ◦불고기특구와 불고기축제 행사는 울주군의 먹거리 향상과 울주군 홍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인근 기장군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울주군보다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큰 명성을 이어가고 있음. ◦언양봉계불고기축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불고기축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축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바람. 	
	3	가축사육 8대방역시 설 설치 현황 점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6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철저히 홍보하고,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 대상 16개 양돈농가에 대하여 설치현황 조사·점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축 수 산 과	4	가축 분뇨 등 무단 방류 사육업자 처벌 규정 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두서면에서 발생한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도 치명적일 것으로 보임. ◦계속하여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가축 분뇨를 방류하는 가축 사육업자에 대하여 부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5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 추진 부서와 악취를 점검하고 원인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업무의 소관 부서가 달라 각자 추진하다 보니 악취문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음. 부서 간 협업하여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또한 가축분뇨 관련 민원 발생 저감과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톱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악취 저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6	태화강생태 관 배양장 운영 방식 개선 및 성과지표 설정 방식 개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화강의 어족 자원을 보전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태화강생태관 내 배양장을 운영하며 한 해 4억여 원이 투입되고 있음. ◦그 중 해마다 연어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 연어 방류량 대비 회귀량이 계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음에도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결과 산출방식을 방류량으로만 채택하여 행정편의성만 강조하고 있음. ◦회귀연어 개체수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어부화장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양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회귀 연어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지표 설정방식 또한 개선하기 바람. 	
	7	태화강생태 관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화강생태관은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방문객은 점차 줄어들고 학생위주의 관람객이 대부분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람객 운영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요구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음. 태화강국가정원 관람객을 생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 안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안전총괄과	1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확대 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부터 운영한 군민안전보험제도는 군민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여 군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혜택임. ◦ 그러나 19개 보장항목 중 10개 이상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경우로 군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안전 보험보다는 생명 보험에 더 가까움. ◦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상해 보장 항목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한 홍보 부족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기 바람(예: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 접수 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안전보험제도 즉시 안내, 경찰서·소방서·병원 등 사고 및 사망과 관련된 기관에 안내 포스터 부착 등) 	
	2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입력(NDMS)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힌남노 태풍 내습 당시 두서면보다 두동면의 침수 피해가 훨씬 심각했는데도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여 NDMS 입력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두서면과 달리 두동면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지 못해 국비 미확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컸음. ◦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관련 부서와 각 읍면에서 피해상황을 즉시 조사하여 피해상황 입력(NDMS)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안 전 총 괄 과	3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 관리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물놀이 안전 관리 기간 중 선바위 물놀이구간에서 안전관리 요원이 근무사항 보고를 위하여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음. ◦당시 사고 지점의 수심은 1.7m로 안전관리 요원이 있었다면 즉시 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여름철에는 해가 길어 오후 6시에도 물놀이객이 많으므로 안전요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물놀이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시기에는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력 증원과 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여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 부실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량 삼정지구는 2012. 1. 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음.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비사업은 1년마다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하나 청량 삼정지구에는 2021. 9. 사면 벌목 이후 조치사항이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르면 재해 위험이 소멸된 지구는 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청량읍 쌍용 하나빌리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면상태 안전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고강도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위험지구 지정 해제 대상이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도 조치내용이 없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보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시행하고 안전 대책을 적극 조치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안 전 총 괄 과	5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 개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사무감사는 군의회가 군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임에도 감사가 진행될수록 집행부 부서장이 부서의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충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의지로 적극적인 수감태도를 보여주기 바람. 	
교 통 정 책 과	1	진하 공영주차장 관리 부실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하 공영주차장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성되었으나 해수욕장과 거리가 멀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카라반, 화물차, 천막 등이 방치되고 잡풀이 우거져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차장 관리가 매우 부실함. ◦진하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주차장 내 불법 방치된 시설물을 즉각 정리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또한 주차장은 여름철에만 관리하지 말고 연중 장기 주차 등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임. 	
	2	교통 불편 만족도 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 실시 결과, 교통 불편 및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 불만족 정도가 40%로 드러남.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들이 실감하여 다음 해에는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3	교통 약자를 위한 마실버스 운영시간 조정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실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두동면 칠조마을의 마실버스는 평일, 공휴일, 장날 각각 운행시간이 달라 이용객에게 혼선을 초래함. ◦승강장에 요일별 운행시간을 공지한다 하더라도 고령의 이용객들이 운행 정보를 습득하여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마실버스의 주 이용객이 교통 약자임을 고려하여 출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교 통 정 책 과	4	온열의자 작동방식 개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온열의자는 천정의 난방 기구에 부착된 센서가 대기 중의 온도를 감지하여 작동되므로 공기가 따뜻한 봄철에는 온열의자가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이용이 불편함. ◦대기 중 온도와 상관없이 온열의자의 온도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센서 감지 방법을 변경하기 바람.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화 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실태 개선) 적극 조치 노력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 실태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기 위하여 2023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용역이 완료될 예정임. ◦전수조사 시행만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실태가 개선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하기 바람. 	
	6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철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샘주차 계도를 위하여 불법주차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음. 매월 10일 정도 계도를 시행하는데도 밤샘불법주차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계도의 효과가 없다고 보여짐. ◦형식적인 계도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민참여단이 계도 업무를 원칙대로 수행하는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7	어린이보호구 역시설 현황 파악 및 안전장치 설치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주군 내 88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여 원을 집행하였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헨스 및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예산 부족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결과임.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 헨스, CCTV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곳에는 즉시 조치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교통 정책 과	8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 해결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이용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유료화 시행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상 불법주차가 증가하여 어린이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됨. ◦주차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9	쾌적한 승강장을 위한 에어커튼 설치 확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커튼은 혹서기 대중교통 이용객 특히 교통약자의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울산광역시 전체 버스승강장 내 에어커튼 설치율은 17%이나 울주군의 에어커튼 설치율은 14%로 턱없이 낮아 울산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에어커튼 설치 예산을 조속히 추가 확보·설치하여 쾌적한 승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환경 자 원 과	1	가축분뇨 관리 위반 업체 행정처분 강화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서면 소재 00농장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법을 17건 위반하였는데 환경자원과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고발 조치만을 실시하였음. ◦00농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축분뇨로 의심되는 폐수를 배출하였으나, 부서에서는 그 폐수가 가축분뇨와 액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액비라고 단정하여 그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음. ◦설령 해당 농장에서 유출한 폐수가 가축분뇨가 아닌 액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액비가 적절치 않게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 등에 유입되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할 것임. ◦또한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다수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시정명령·고발조치 외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 등은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지금까지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인근 주민들은 고통은 커지고 청정지역이었던 마을의 지하수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임. ◦채취한 시료의 성분을 즉시 분석하여 액비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00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환경 자 원 과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 항목 배점 조정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평가 시 주민만족도가 가장 중요한데 평가지침서에 따라 주민만족도에는 30점만 배정되어 3개사는 주민만족도가 낮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임. ◦주민만족도등 평가항목 배점 재조정을 검토하여 의미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신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올바른 경쟁시장이 형성되도록 평가지침서의 항목을 재검토하기 바람. 	
	3	용역비 정산 시 급여 지급 확인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용역비 정산 시, 원가 산정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 등이 지급되는지 부서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음. ◦대행업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식대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부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위법한 부분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또한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원가를 산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원가 산정 기준과 실제 작업 현황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4	악취 시료 채취기 설치 위치 재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시료 채취기를 설치하였으나 채취기가 설치된 굴뚝을 통해 발생하는 악취보다 운반, 보관 시 악취가 많이 발생하므로 채취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악취를 바로 채취하여 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채취기 설치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5	쓰레기 종량제봉투 의 합리적 가격 산정 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20L 종량제 봉투는 200원~900원(울주군: 600원)으로 지자체 간 가격 격차가 심함. ◦수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농촌보다 도심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울주군의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높은 편에 속함. ◦쓰레기 처리에 합리적인 종량제봉투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산 림 공 원 과	1	임도 적극 개설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자원을 가치 있게 가꾸고 산불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임도개설은 매우 중요함. ◦임도신설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한 곳이라도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2	명선도 및 간절곶공원 사업 적극 추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사업 추진 시 타 부서와 협업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부서간 소통을 활발히 하여 명선도 및 간절곶을 우리군 명소로 만드는 데 힘써주기 바라며, 특히 명선도 둘레길, 인도설치 사업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람. 	
	3	산림 훼손 예방 대책 마련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복구 명령에 따라 행위자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서에서는 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계획서대로 복구하였는지 사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훼손된 산림 복구에 필요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훼손된 산림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림훼손을 적극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공원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서 근린공원과 구영들공원조성 사업이 보상 협의 및 사전 행정 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주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행정 간 협의, 서류 보완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5	인력 총원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주군 전 면적의 68%는 산림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아 현재 인원만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곤란함. 조직 개편 시 인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산림공원과	6	등산로 정비 시 나무데크 활용 최소화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산로 정비 시, 나무 데크는 사후 관리에 소홀하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지므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야자매트 등 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활용하기 바람. 	
	7	산지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 상승 및 체계적인 산지 관리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쭉이 울주군 가지산, 고현산 등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400년 이상 된 철쭉이 등산로 옆에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하여 대부분 관광객이 모르고 지나치게 됨.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 시행 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울주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홍보할 좋은 기회인데,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음. ◦관내 산지 철쭉 군락지 등을 파악하여 관광 콘텐츠에 적극 활용하고 등산로 정비 시 홍보 안내판도 같이 정비하여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8	간월재 및 신불재 억새 관리 철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월재 억새평원의 억새의 생육강화를 위해 억새베기 작업을 시행 중이며 베기 전과 후의 억새 생육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나머지 구간으로 확대·시행하기 바라며, 베어낸 억새는 현장에서 파쇄하는 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신불재 주변으로 케이블카 정류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광자원으로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불재의 억새를 미리 정비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토 지 정 보 과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적극 검토 (건의)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우리군 관내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2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 철저 (건의)	◦편리한 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환하였으나 다른 지자체 간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택배 배송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예: 화정1길-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주군). ◦도로명주소 부여 시 지역명에 대한 타 자치단체 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군민이 도로명 부여 방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3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가속화 (건의)	◦1년에 2~3개 마을씩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마을안길 관련 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 ◦부서 내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인력 총원이 어렵다면 용역 발주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위 생 과	1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점검 철저 (건의)	◦울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어린이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으므로 센터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2	위생업소 행정처분 감경 여부 검토 (건의)	◦위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통해야만 20일로 단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심판 판례를 적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전 사정이 참작되면 부서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람.	
	3	효헤어숍 지원 사항 확대 (건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헤어숍에 참여하는 업소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요청한 바 있었고, 금년부터 소액 확대되었음.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이미용업소 뿐 아니라 목욕업소도 해당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도 시 과	1	도시계획위원회 참석률 제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중요한 심의기구로,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저조한 참석률(58%)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결과, 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2022년 개최된 위원회 참석률은 78%로 많이 개선되었음.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자문 등에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참석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활성화하기 바람. 	
	2	개발제한구역 내 홍보로 불법행위 예방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개발행위 단속 이전에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였음. 2022년에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안내 팸플릿 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결과,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31건으로 2021년 52건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구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홍보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div> <div>근거</div> <div>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대한 규정</div> </div> <div> <div>제4조(홍보 및 교육)</div> <div>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 정책실행 상황 4. 법령위반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벌칙규정에 대한 안내 5.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div> </div>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도시과	3	도시계획 시설 실효 방지를 위한 노력 (시정)	<p>◦언양읍 도시계획시설 중로2-206 도로는 2016. 3. 14.에 418m로 계획하였으나, 2020. 6. 5. 355m로 변경되었음.</p> <p>◦원래 계획보다 63m 축소되어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못한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구간에 접하여 계획되었던 소로3-10도로가 일몰제 적용으로 실효되면서 중로2-206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구간까지 같이 실효되었음. 그 결과 중로 2-207도로와 중로2-206도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p> <p>◦도시계획결정 후 사업계획 없이 2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나 보상을 위한 집행계획 공고 시 실효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p> <p>◦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주시기 바람.</p>	
			<p>자료 서문길 중2-206 도로</p>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건의)	<p>◦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집행계획도 없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p> <p>◦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 해제를 검토하기 바람</p>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도 시 과	5	두현 공영주차 장 이용률 제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두현저수지 일원 도로를 확포장(‘23. 4.20. 준공) 하면서 두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 75억을 투입한 주차장이 외면받고 노상 불법주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 설 과	1	간이급수 시설 수질관리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울주군 내 155개 마을에서 1만5천여명이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울주군에서는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수시로 수질 점검을 하고 있으나,◦매 분기 검사 대상인 14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울현마을의 지하수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으며◦여러 마을에서 지하수에 석회질이 검출되는 등(청량만주곡마을, 범서 내사마을: 정수 필터 설치 후에도 계속 석회질 검출) 간이급수시설 수질 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임.◦석회질이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관내 간이급수시설에서 석회질이 검출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근거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불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건 설 과	2	시 상수도 미공급 마을의 식수 이용방법 전수조사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10세대가 거주하는 청량 망해마을에서 27년동안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관내 간이급수시설 이용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결과, 망해마을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에서 어떤 방법으로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망해마을 사례와 같이, 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먹는물 사각지대에 방치된 곳이 없는지 전 수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3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 8. 25. 서생면 화산천 범람으로 명산·화산리 인근 주민이 입은 침수 피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5:5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음. ◦이와 유사하게 두서면 복안천, 마병천 등이 하천 정비 미준공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끊임없이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해주기 바람. 	
	4	구영천 친수하천 사업 지연 사유 검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편성된 보상비도 이월하여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음. ◦사업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추진하거나,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사업계획을 과감히 취소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건 설 과	5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철저 (건의)	<p>◦ 관내 지방하천 69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9개소는 공사 진행중이며 정비를 완료한 구간은 없음</p> <p>◦ 「소하천 정비법」에 따르면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관내 소하천 92개소 중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곳은 33개소에 불과하고 2022.12.31. 기준 정비가 완료 된 곳이 전무함.</p> <p>◦ 2023. 하반기에 부서 내 소하천 팀이 조성되면 인 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개소라도 하천 정 비를 완료하기 바람.</p> <table><tr><td>근거</td><td>소하천 정비법</td></tr></table> <p>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p> <p>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근거	소하천 정비법	
	근거	소하천 정비법				
	6	상북 덕현천 내 익사사고 원인 파악 및 예방조치 (건의)	<p>◦ 2022년 상북면 덕현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구간의 유량이 많거나 수심이 깊은 것도 아닌 데 3~4년마다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왔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하기 바람.</p>			
7	회야강 오수관로 범람 해결을 위한 계획 제출 (시정)	<p>◦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야강 오수관로에 우수 유입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누출 원인을 탐지하기 위한 하상관로 내 CCTV 설치 및 준설 작업 외 추가로 조치한 내역이 없음.</p> <p>◦ 10년이 넘도록 누출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답보상태에 있으며, 연내 작업량도 파악하지 못하였음. 향후 하상관로 정비를 어떻게 완료할지 계획을 세워 제출하기 바람.</p>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도 로 과	1	도로점용 허가 연장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에 따라 허가받은 점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신청에 따른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여야 함. 타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비대면 온라인 도로 점용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납부, 허가증 발급까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울주군에서는 의례적인 절차만 고집하고 있음.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도로 점용허가 사무를 개선하기 바람. 			
	2	인도 관리 부실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인도의 보도 블록 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관내 설치된 인도 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도로 관리주체를 따지지 말고 보행이 불편한 구간은 즉시 정비하기 바람. <table> <tr> <td>근거</td> <td>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td> </tr> </table> <p>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3	서문길 중2-206 도로개설 중지-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의 원인 파악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양 도시계획도로(중2-206호)의 일부 구간이 문화재현상변경 불허로 미개설 상태임. 문화재청과 협의도 하기 전에 사업 구간이 455m에서 360m로 축소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협의 내용(공문서)이 없음. 2023. 5. 문화재 심의위원 14인 만장일치로 현상변경 최종 불허 통보되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도로과	4	마을안길 분쟁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안길(비법정도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속하여 의회에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법정도로에 대해 군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 막대한 보상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보상금액 또한 추정치일 뿐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님. ◦마을안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수 데이터를 구축해야만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관내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5	형식적인 수감 태도 개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에도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한 부분이 없고 형식적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음. ◦마을안길 분쟁과 관련한 보상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요청하였는데도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추정하여 우려를 표할 뿐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며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개설 사업이 1년동안 5% 진척되는 등 부서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런 자세라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임. 이러한 행정 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미온적 답변과 개선 의지 부족의 폐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가고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될 것임.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건 축 허 가 과	1	건축허가 신청 과정의 민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 제안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 1. 건축허가과가 신설되어 건축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주문한 택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배송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이 신청한 건축허가 건의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중인지 간편하게 확인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함. 	
	2	행정 절차 이행 시 관련사항 면밀히 검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하여 선량한 민원에게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행정 절차 이행 시 관련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3	건축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개선책 강구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 1. 1. 신설된 건축허가과는 타 지자체에서도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례가 있음. ◦건축허가 방문 민원의 이동 동선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원 처리 개선책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4	현행통로 도로지정 시 토지소유주 와 협의 철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통로를 도로로 지정 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은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지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와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고 소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주택과	1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추가 검토 및 안내 철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일괄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관내 대단지 아파트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 상한액 구간을 세대 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석축·옹벽 보강 지원 사업을 각 읍면에 안내하여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바람. 	
	2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시 현장 확인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서면 00농장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서도 현장에서는 불법 증축행위가 계속하여 진행중이었는데도 담당자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철거 기한 연장을 허가하였음.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만 확인했더라도 불법 증축 진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철거 기한 연장을 허가한 처분은 행정업무 실수가 아닌 태만으로 보임.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불법건축물에 대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주— 안전점검 대상 확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원받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노후화한 건물이 많은데도 안전 관련 지원대책이 없음. ◦단독주택 거주자도 군민으로서 안전한 거주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시 설 지 원 과	1	남부 청소년 수련관 내 수영장 하자 책임 규명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청소년수련관은 254억 사업비를 들여 준공하였고 현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련관 내 수영장은 2022년 5월부터 수영장 물에 기포가 발생하고 벽면에서 노란물이 누수되는 등 하자발생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지 상태이며 주민불편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수영장의 방수와 관련된 하자보증 기간은 2024. 1.24.까지로 보증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하자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고, 법률상 하자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어 시공사에 강력하게 하자보수 요청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수영장 하자발생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시공사의 하자로 판명되면 수영장을 운영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내 집을 짓는다는 신념으로 임해 주기 바람. 	
	2	삼남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전 건립 사업 설계변경 원인 규명 및 공공건물 건립 사업 추진 철저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남 장애인근로자 사업장 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서 작성 시 천공(차수공)의 내역을 적용하면서 단위 및 수량 작성에 오류가 발견되어(768m에 해당하는 128공을 기입하여야 하나 128m로 오기) 설계를 변경하였고 공사비가 41,061,178원이 증액됨과 동시에 공사기간 또한 4개월이 연장되었음.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동시에 야기시킨 설계변경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설계사무소 착오라면 간접비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바람. ◦또한 장애인근로자들이 사용할 건물을 설계하면서 주출입구 경사로 등 BF인증 관련 문제로 설계변경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건물 건립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시 설 지 원 과	3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관련 공사 추진 시 대부분 몇 차례씩 설계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공사 금액이 증액됨. ◦ 최초 설계가 잘못되면 이후 공사 추진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며, 공사비 증액과 준공기한 연장의 피해는 결국 군민이 떠안아야 하므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신 성 장 개 발 과	1	드론 산업 육성 강화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울주군에 보유한 드론은 총 16대로 각 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며 신성장개발과는 4대를 보유 중임. ◦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드론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드론은 민간에서 쉽게 접목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행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기 바람. 	
	2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으로 총 사업비 430억원에서 58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 울주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기한 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기 바람 	
	3	언양 송대지구 미준공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 노력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양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구 외 도로(인가조건에 포함)가 개설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 추세이며 방치된 시설물로 인해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비 조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